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22. 11. 7.

목차

※ 클릭 후 파란 글씨 클릭하면 해당 주제로 이동합니다.!

목차	1
상세한 목차	2

상세한 목차

※ 클릭 후 파란 글씨 클릭하면 해당 주제로 이동합니다.!

목차	1
상세한 목차	3

들어가기 전에...

※ 타 직렬이나 혹은 기타 다른 문서가 궁금하시다면

 "아카이브  " 참조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공공누리 관련 공지 또한 위 링크에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https://open.kakao.com/o/sSL8zGSd>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처 :

저작권자 :

공공누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소개

위원장

인사말

프로필

주요 일정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란다

부위원장/위원

부위원장프로필

상임위원프로필

비상임위원프로필

업무계획·예산

주요업무계획

새정부 주요 업무계획

권익구제를 통한 민생안정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1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적 권익구제

| 범정부 고충민원
총괄기능 강화



| 집단민원 조정으로
사회갈등 해소



| 쉽고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2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 제도개선

| 국민제안의
적극적인
정책화



| 빅데이터 분석
활용 정책지원



|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상식 확립

|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 공공부문
청렴수준
제고



| 신뢰받는 신고자
보호 · 보상 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적 권익구제



| 범정부 고충민원 총괄기능 강화

- 민원서비스평가 등을 통해 각 기관의 민원처리 품질을 제고하고 서민피해가 우려되는 주거·복지·금융 고충민원 집중 해결
- 소외지역·취약계층과 영세·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고충해소



| 집단민원 조정으로 사회갈등 해소

- 대규모 집단민원·사회적 갈등 적극 조정·합의
- 민원인-이해관계자-전문가 참여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운영



| 쉽고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 특별행정심판기관(66개) 통합 및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연계 확대
- 청구서 자동완성, 맞춤형 사례 제공, 메타버스 체험 등 국민편의 제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제도개선



I 국민제안의 적극적인 정책화

- 접수된 국민제안을 기관 협업을 거쳐 정책화
- 국민제안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I 빅데이터 분석 활용 정책 지원

- 디지털 플랫폼 국민신문고에 AI 신기술·디지털원패스 도입
- 현안이슈-민원빅데이터 융·복합 분석으로
민원예보 발령 및 제도개선



I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

- 주요 현안 제도개선으로 부패·고충을 근원적으로 예방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대상 기관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국민권익 증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상식 확립



|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 공공기관의 방만한 관사운영 및 국가자격시험 공직자 특혜 등 불공정 개선



| 공공부문 청렴수준 제고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운영 내실화
-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저조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 제공



| 신뢰받는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 법률마다 상이하게 운영되는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
- 신고자 보상금 상한(30억원) 조정·폐지 및 지급률 상향(4%~30%→30%)

권익구제를 통한 민생안정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1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적 권익구제

| 범정부 고충민원
총괄기능 강화



| 집단민원 조정으로
사회갈등 해소



| 쉽고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2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 제도개선

| 국민제안의
적극적인
정책화



| 빅데이터 분석
활용 정책지원



|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상식 확립

|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 공공부문
청렴수준
제고



| 신뢰받는 신고자
보호 · 보상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요약)

권익구제를 통한 민생안정,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핵심과제 ①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 (총괄기능 강화) 각 기관 민원처리 품질 제고, 현장중심 민원해결 강화
- (집단민원 조정) 대규모 집단민원 적극 조정·합의,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활성화
- (촘촘한 권익보호) 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국방·경찰음부즈만 강화

핵심과제 ② 쉽고 편리한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 (원스톱 행정심판)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일원화
- (독립성·전문성 강화) 행정심판위원 신분보장 강화, 위촉분야 확대
- (신속·편리한 서비스) 'EASY 행정심판' 기능 제공, 메타버스 체험·홍보관 개설

핵심과제 ③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참여 활성화

- (국민제안 정책화) '국민제안' 우수제안 발굴, 최우선 정책반영 및 관리·홍보
- (빅데이터 분석) '국민신문고' AI신기술 도입, 국민안전 민원예보·제도개선 연계
- (제도개선·적극행정) 제도개선으로 부패·고충 예방, 적극행정 국민신청 기관 확대

핵심과제 ④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으로 공정과 상식 확립

- (불합리 관행 개선) 채용비리신고센터 설치, 방만 관사운영·불공정 국가자격시험 개선
- (공공부문 청렴 제고) 반부패규범 운영 내실화, 공공기관 청렴수준 종합평가 실시
- (청렴문화 확산) 맞춤형·법정청렴교육 강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전파

핵심과제 ⑤ 국민에게 신뢰받는 신고체계 및 보호·보상제도 구축

- (신고 활성화) 부패·공익신고 변호사 대리범위 확대, 이슈 현안 집중신고기간 운영
- (공공재정 누수 근절) 청렴포털 활용 부정청구 관리, 빈발분야 기획 실태조사
- (보호·보상 제도개선) 5개법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통합, 신고자 보상금 상향 등

공통과제 ①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

- (반부패 규제 합리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기준 정비, 온라인 대리신고 확대
- (정부 규제혁신 지원) 국민제안·민원빅데이터 분석, 현장의 규제성 민원 해소
- (적극행정신청·소극행정신고) 규제로 작용하는 공무원의 소극행태 개선

공통과제 ②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위원회 정비(2개중 1개, 50%)

- (행정심판통합)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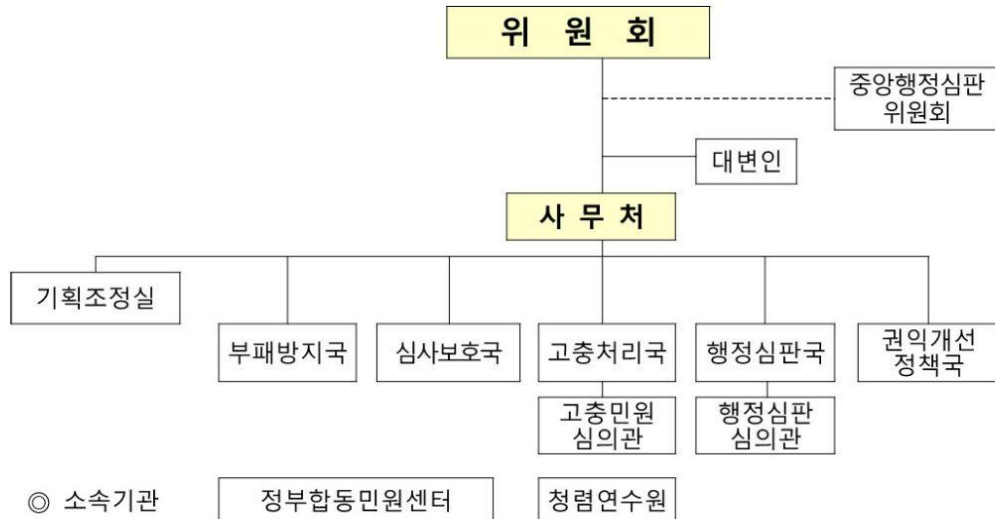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2022. 8. 23.

I. 일반 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 (위원회)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사무처) 1실 5국 2관 1대변인 41과 2소속기관



2 인원 현황

(‘22. 6. 30. 기준)

구 분	직급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기타
합계	정 원	568	4	17	14	35	42	209	235	12
	현 원	552	4	17	15	33	43	208	223	9
본부	정 원	488	4	15	13	29	40	184	192	11
	현 원	472	4	15	14	27	38	181	185	8
소속기관	정 원	80	0	2	1	6	2	25	43	1
	현 원	79	0	2	1	6	5	27	37	1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 (B-A)	(B-A)/A
계	90,835	93,288	2,453	2.7
인건비	47,833	48,240	407	0.9
기본경비	7,437	7,908	471	6.3
주요사업비	35,565	37,140	1,575	4.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0,580	11,473	893	8.4
국민고충해소	1,625	1,331	△294	△18.1
행정심판	1,144	1,076	△68	△5.9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	10,682	11,266	584	5.5

Ⅱ. 핵심 추진과제

비전

권익구제를 통한 민생안정,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목표

민생고충 최우선 해결,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

핵심
추진
과제

**국민에게 힘이되는
적극적 권익구제**

법정부 고충민원
총괄기능 강화

집단민원 조정으로
사회갈등 해소

쉽고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제도개선**

국민제안의
적극적인 정책화

빅데이터 분석
활용 정책지원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상식 확립**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공공부문
청렴수준 제고

신뢰받는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공
통
과
제

1.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

- △ 반부패 법·정책의 규제 합리화
- △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접점의 규제 개선
- △ 규제성 민원·부당한 행정 적극 해소

2.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위원회 정비

- △ 각 기관에 산재된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과 중앙행심위 통합 (국정과제)

①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 ◇ 정부 내 **중립적·최종적인 권익구제 전문기관**으로서 영세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충**을 **집중 해결**하고 **민생안정 지원**

□ **법정부 고충민원 총괄기능 강화**

- (실효성 제고) 민원서비스평가·청렴도평가를 통해 각 기관 민원처리 품질을 제고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제3자 입장에서 적극 해결*
 - * **고충민원 인용률 제고**(시정권고·조정·합의 등) : 최근 3년 20.0% → '22년 21.3%
- (민생고충 해결) 관계기관 협업으로 서민피해가 우려되는 주거·복지·금융민원을 집중 해결하고, 대통령실 서신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 * 서신민원 중 취약계층 생활고 등 시급성이 있는 경우, 권익위 직접 조사→처리결과 보고

주 거	복 지	세 무·금 융
 임차권 승계, 강제 퇴거, 시설 개보수 등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고충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 장애등급 결정 등 저소득층 고충	 단순 신고누락 등으로 인한 과다 세금부과, 보험계약 등 피해

- (현장중심 민원해결) 소외지역·취약계층* 및 영세·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고와 경영상 애로사항 등 적극 상담·해결
 - * '달리는 국민신문고'('21년 91회→'22년 100회) **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연12회)

□ **집단민원 조정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 (집단민원 적극 해소) 대규모 집단민원, 장기간 표류하는 갈등사안 등을 조정·합의를 통해 적극 해결('22.6월 기준, 집단민원 54건 조정·합의)
- (조정 실효성 강화) 초기 현장방문 강화, 민원인-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조정 성공률 제고
 - ※ (사례) 울진죽변비상할주로 폐쇄 요구(7,606명), 조치원비행장 군사보호구역 축소 요구(1,770명)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권익보호**

- (지역민원 해결역량 강화) 권익위를 보완하여 지역 현안민원을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컨설팅·우수사례 공유
 - * 전국 67개 지자체 설치·운영('22.6월), '50만 이상 지자체 설치 의무화'(개정안 국회 계류)
- (전문옴부즈만 활성화) 전문조사관이 군 복무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국방·경찰옴부즈만 강화
 - ※ 사건 초기부터 전문조사관을 지정·운영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 확산 차단

② 쉽고 편리한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 다양한 특별행정심판기관 및 온라인 접수·처리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심판의 **공정성·신속성 제고**

□ 국민중심 원스톱(ONE-STOP) 행정심판 구현 국정과제 13

- (행정심판기관 통합)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66개) 통합 추진
 - 각 기관별 의사결정구조, 사건처리·인력운용 현황, 통합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단계적 통합 대상 선별 및 법개정안 마련(~'23.6월)
 - ※ 통합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22.7~12월), 공청회('23.1~4월) 추진
- (온라인 시스템 통합)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한 곳에서 청구·진행상황 확인·사건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구현(~'25.12월)
 - ※ 행정심판 기관 중 60.2%가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중
 - ※ 통합에 따른 허브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23.1~6월)

□ 행정심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국정과제 13

- (독립성 보장) 행정심판 심리·재결 과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행정심판위원의 신분을 법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파면사유 한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은 불리한 처분 금지
- (전문성 강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 ※ (현행) 법률, 의료 분야 → (향후) 회계, 건설, 의약품 분야 등으로 확대

□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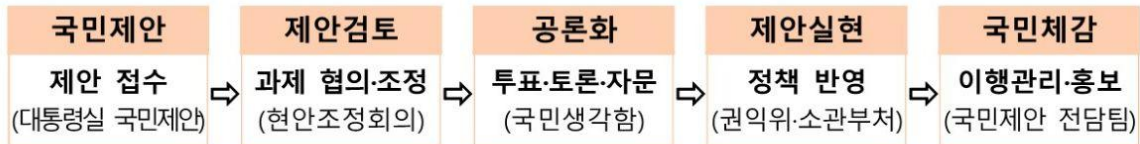
- (EASY 행정심판)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 도입, '청구인 맞춤형 심판사례' 제공 등('23.1월)
 - * 처분 유형·일자, 행정심판 종류 등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선택하면 청구서 완성
- (메타버스 체험·홍보) 행정심판 접수부터 심리까지의 과정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체험·홍보관*' 개설('22.7월)
 - * 상담관(1:1 화상상담), 체험관(심판정, 모의행정심판), 교육관, 이벤트관(OX퀴즈)으로 구성
 - ※ 향후 체험관에서 온라인 행정심판 접수까지 가능하도록 연계 추진(~'24년)

③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참여 활성화

◇ 제안, 민원 등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제도개선 추진**, **민원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개선 지원**

□ 국민제안의 적극적인 정책화 지원

- (제안접수·정책화)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 기관협업·국민생각함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숙성
※ 대통령실과 협업하여 '이달의 우수제안 선정 제안분석(일일주간·월간, 월간 브리핑 등 지원(228월~)
- (이행관리·홍보) '국민제안 전담팀'을 구성하여 발굴된 정책과제의 최우선 정책반영 추진 및 이행관리·대국민 홍보 실시('22.7월~)



□ 공공·민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지원

- (AI 국민신문고) 연간 2천만건 민원이 집중되는 디지털 플랫폼 국민신문고의 연결기관을 확대*하고, AI 신기술·디지털 원패스 기능 도입
* '21년 6월 현재 1,092개 기관 연결 → 사립대학교, 공공기관 등 2,000개 이상 확대 추진
- (빅데이터 분석) 국민관심 현안이슈에 대해 민원빅데이터와 융·복합 분석을 실시하여 국민안전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
*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예측 시스템' 구축(~'24년)으로 선제대응 및 피해방지 기능 강화

□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적극행정

- (제도개선)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주요분야(경제활성화, 청년지원, 사회안전망, 생활속 불공정 등) 관련 제도개선으로 부패·고충을 근원적으로 예방
※ (예시) 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국민불편 해소,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개선,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 노인학대 방지 감독체계 및 장기요양보험 정비 등
- (적극행정) 중앙부처·지자체 대상 시행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전 공공부문에 국민중심의 행정 확산
* 국민이 법령 불명확 등으로 거부된 제안·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④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으로 공정과 상식 확립

- ◇ **국가 청렴도* 20위권 도약**으로 대한민국 브랜드의 획기적 향상
 -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대표적 국제반부패 지표, 한국은 '21년 180개 국 중 32위(62점)
- ◇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청렴 역량의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채용비리 근절)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등) 공정채용 표준지침 마련(~'23.1월) 등 공정채용 기반 강화·확산 국정과제 91
 - ※ 공직유관단체('21년 채용·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1,212개) 채용실태 전수조사(~10월)
- (부패유발 법규 개선) 공공기관 사규(~12월)·지자체 자치법규(22.7월~23년)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하여 불공정 규제로 인한 부패유발 요인 집중 정비
- (불공정 관행 제도개선) 공공기관의 방만한 관사 운영, 공직자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자격시험 등 불공정 제도 적극 개선 국정과제 13, 91

□ 공공부문 청렴수준의 획기적 제고

- (반부패 행위규범 내재화) 청탁금지법('16년 시행), 이해충돌방지법('22년 시행) 등 반부패 행위규범 운영을 내실화해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 안착
 - ※ 공직자 교육, 워크숍 등 소통 강화(연중),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이행 점검('22.하반기)
- (종합청렴도 평가) 각급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의 부패인식·실태와 함께 반부패 노력 성과를 포함한 공공기관 청렴수준 종합 평가('22~)
 - ※ 총 573개 기관(중앙부처 46개, 지자체 243개, 공공기관 199개 등)을 대상으로 평가 진행
 - 청렴도 저조기관(4~5등급)은 청렴컨설팅으로 맞춤형 개선안(조직문화,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 제공

□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 확산

- (청렴교육 강화) 맞춤형 청렴교육* 및 법정 청렴교육(연 2시간) 이행관리** 강화
 - * 고위공직자, 공기업(청렴윤리경영), 공정채용 등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개발·제공
 - ** 기관별 의무교육(연 2시간) 이수실적을 점검, 저조 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등 조치('22.하)
- (청렴윤리경영 지원) 공기업 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개발, 컨설팅·교육을 통해 자율실천 지원

⑤ 국민에게 신뢰받는 신고체계 및 보호·보상제도 구축

◇ **부패·공익 신고 등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으로
공정사회를 조성하고 건전재정을 지원

※ 부패·공익신고 등으로 10년간('12~'21년) 총 2조 6,539억원의 재정수입 회복·증대 발생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제도강화

- (비실명 대리신고 확대) 부패·공익신고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의 대리범위를 신고 이후의 조사·수사·재판 등으로 확대
- (집중신고기간 운영)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공익침해·부정수급 현안에 대해서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적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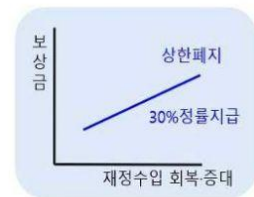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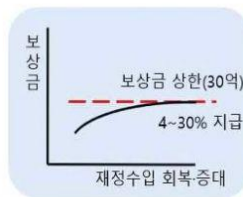
□ 체계적 신고 관리로 공공재정 누수 근절

- (공공재정 부정청구 관리강화) '청렴포털'로 부정청구 신고·관리, 기관별·예산사업별 부정수급 비율 및 환수금액 등 대국민 공개
※ 중앙·지자체 등 308개 기관의 환수제재 현황 분기별 점검 및 누락 시 환수 등 적극 조치
- (취약분야 실태점검) 부정수급 신고현황 분석결과 파악되는 부정청구 취약·빈발분야(고용·노동, R&D·산업 등)는 기획 실태조사로 집중 점검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

- (제도 일원화) 공공재정환수법 등 5개 법률에 각각 달리 규정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국민혼란 예방(~'23.6월)
※ 보상금 지급요건, 불이익조치 일시정지·보호조치 불이행 이행강제금 도입 여부 등 통일

- (신고자 보상금 상향) 환수 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지급률(4~30%)을 30%로 통일, 상한액(30억) 조정·폐지



- (신분노출 적극 방지) 신고자 신분을 공개·보도한 자뿐만 아니라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구·지시한 자도 처벌(개정안 국회 계류)
- (보호조치 실효성 제고) 보호조치 의무 위반자 명단공표, 신고자 정보 관련 기사 삭제 등 신고자 보호제도 보강(개정안 국회 계류)

Ⅲ. 공통과제 이행계획

①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

□ 개 요

- 반부패 법·정책의 규제 합리화, 고충처리·행정심판·제도개선 등 위원회 전 역량을 집중하여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필요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① 반부패 법·정책의 규제 합리화 추진

- (불합리·과도한 규제 개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규범의 운영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기준·방식 등 발굴·정비
※ 최근 3년간 빈발질의,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 피규제자 관점의 수요 분석을 통해 소관 법상 정비 필요 규정 발굴(1차 : ~'22.하반기)
- (국민불편 요소 제거)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온라인 비실명 대리신고 확대, 보호·보상 통합기준 마련 등으로 국민불편 요소 적극 해소

② 국민 접점에서 정부 내 규제혁신 전방위 지원

- (중점분야 집중개선) 국민제안·민원빅데이터 등 국민 목소리를 분석하여 국민 생활 접점에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집중 발굴
* ('21년) 부동산 중개보수서비스 개선, 친환경차 지원제도 개선, 아동급식카드 지원 강화
- (규제·부당행정 해소) 현장중심 고충처리,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성 민원이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해소

③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문화 조성 및 확산

- (적극행정 활성화) 기관에서 거부된 제안·민원의 재처리를 요청하는 '적극행정국민신청제'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선과제를 면밀히 검토
* 중점 추진분야(청년세대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코로나19 민생회복, 생활속 불편)
- (소극행정 예방) 각 기관의 소극행정 처리결과에 대한 재신고를 적극 검토하고 조치를 권고하여 규제로 작용하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
※ 소극행정 빈발분야 사례 조사·분석(~'22.12월), 이행점검(1차: ~'22.12월)

②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위원회 정비

□ 정비 대상 위원회 : 전체 2개 중 1개* (5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
 - *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반행정심판기관(헌법기관·지자체 행정심판기관 등)을 제외하고, 각 기관에 흩어진 **총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대상 통합**을 검토·추진 중(국정과제)
- (보상심의위원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 단순 자문·협이가 아닌 관련 **법령에 따른 의결권**을 갖고 **권익위 핵심기능(신고자 보호·보상)**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존치 필요성이 높음**

□ 정비 방안 : 행정심판위원회 통합(국정과제)

- (필요성) 소청심사위, 중앙노동위, 조세심판원 등 66개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행정 비효율 및 국민 불편 발생
 - ※ 대부분 처분청의 상급 중앙부처에 설치되어 독립성·객관성 훼손 우려도 존재
- (주요내용)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 등의 조직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단일 위원회에서 운영
 - 각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특성, 의사결정구조, 운영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 검토·추진
 - 전체 행정심판기관의 심판청구·사건처리 온라인 시스템 통합
 - ※ 현재 123개 기관(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포함) 중 74개 기관(60.2%)이 온라인 허브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우선 연결(link) 후 단계적 통합
- (기대효과) 기관 및 온라인시스템 통합 운영을 통한 조직·인력·예산 효율성 극대화 및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편의 제고

□ 추진 계획

-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합방안' 연구용역('22.7~12월)
- 「행정심판법」 개정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국회 제출 등(~'23.12월)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BPR/ISP('23년) 및 통합 완료('24~'25년)

붙임

소속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소속	설치근거	위원장 (임기)	위원 수 (공무원 제외)	전임 직원 수	'19~'21 회의실적 (본회의만, 서면제외.)	'22 예산 (단위 : 백만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권익위	법률	김기표 (권익위 부위원장 20.1~23.1)	66	65	341	1,076 (인건비 정보화 제외)
보상심의위원회	권익위	법률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 21.9~22.12)	5	10	31	32
계	대통령 : 0개 총리 : 0개 부처 : 2개	법 : 2개 령 : 0개 규칙 : 0개		평균 35.5	평균 37.5	평균 186	평균 554

[참고] 특별행정심판기관 현황(총 66개)

▲ 조세심판원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
▲ 특허심판원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 시·도 소청심사위원회(17개)
▲ 중앙노동위원회	▲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시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17개)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난민위원회	▲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소속 소청심사위원회(4개)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
▲ 국세심사위원회	▲ 광업조정위원회	▲ 각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3개)
▲ 관세심사위원회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
▲ 장기요양심판위원회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연도별 주요 업무계획

예산내역

국정과제

국정비전과 목표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국정과제13]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행안부·권익위·법제처)

[국정과제91]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기관소개

구성 및 연혁

통합전 기관연혁

역대 위원장

위원회상징

위원회 상징(CI)

위원회 마스코트

청렴한세상BI

위치안내

찾아오시는길

층별안내

조직 및 직원안내

정책·정보

부패방지 정책

부패방지 정책 소개

반부패·청렴 정책

부패·공익신고 등

신고자 보호·보상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개요

부정청탁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신고처리절차 등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한눈에 보는 공직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개요](#)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한눈에 보는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개요](#)

[공공재정·공공재정지급금](#)

[환수·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보상](#)

한눈에 보는 부패행위신고

부패행위신고 개요

부패행위 유형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

한눈에 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요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상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소개

부패방지 자료실

청렴정책

[2022년도 반부패 수범 유공 포상 추천 안내](#)

[22년 10월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

[2022년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전체 기관 통합\) 특강 자료](#)

['새 정부 범정부 반부패 기본전략'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2년 9월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

[2022년도 하반기 반부패 청렴 중점 추진과제](#)

[공공기관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22년 8월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

[2022년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교육청 대상\) 발표자료](#)

[2022년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교육청 대상\) 특강자료](#)

[22년 7월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

[2022년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공직유관단체 대상\) 자료 공유](#)

[2022년 6월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

[반부패 정책, 법률 등 혁신관련 정책연구](#)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백서](#)

[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실적 점검 결과](#)

[2022년 5월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2022년 4월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

[청렴사회협약 길잡이](#)

[2022년 3월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

[2022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2022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결과](#)

[2022년 1월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

[2022년도 주요 반부패 청렴정책과 추진과제](#)

청탁금지법

[2022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설명회 자료](#)

[\[카드뉴스\]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2022\)](#)

[청탁금지법 개정\(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카드뉴스](#)

[2021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

[\[카드뉴스\]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

[\[카드뉴스\] 2022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웹배너\]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웹배너 및 카드뉴스\]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공직자 행동강령

[2022년 하반기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등 지원 설명회 자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2022. 8. 5. 개정·시행\)](#)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022. 6. 2. 개정·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2022. 6. 2. 개정·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통계](#)

공공재정환수법

[2022년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 교재](#)

청렴도 평가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안내서](#)

[2021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및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가이드라인](#)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학교 현장의 예체능 분야 청렴수준 측정 결과](#)

부패방지시책사례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100선](#)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 사례 발표\(보건복지부\)](#)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 사례 발표\(한국관광공사\)](#)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 사례 발표\(제주특별자치도\)](#)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업데이트\('22. 11. 1. 기준\)](#)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업데이트\('22. 10. 18. 기준\)](#)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업데이트\('22. 8. 31. 기준\)](#)

[2022년 상반기\(1~6월\)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2022년 1~3월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업데이트\(22. 4. 21.기준\)](#)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최종 \(22. 2. 17.\)](#)

[202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신고자 보호·보상

[2022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영상](#)

[2022년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 제작·배포](#)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 현황](#)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지급 현황](#)

[부패·공익신고 홍보용 웹배너 파일\(2022\)](#)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시청각 교육자료\(2022년, 기관 담당자용\)](#)

[부패·공익신고 홍보용 리플릿, 포스터파일\(2022년\)](#)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통계\('21.12.31.기준\)](#)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 2022년\)](#)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통계자료](#)

[부패신고자 보호 관련 통계자료](#)

신고사례

[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9월\)](#)

[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8월\)](#)

[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7월\)](#)

[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6월\)](#)

[2021년 부패 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제20집\)](#)

[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5월\)](#)

[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4월\)](#)

[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3월\)](#)

[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2월\)](#)

[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1월\)](#)

[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1년 12월\)](#)

국제협력

[2020년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발표 결과](#)

[2019년도 IPI 지수 발표 결과\(수정\)](#)

[2020년도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법치주의 지수 발표](#)

[2020년도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아시아부패지수'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현황 등 자료제출 관련 주요 질의 응답](#)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알림\(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카드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동영상\(30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리플릿](#)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및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안내](#)

고충민원 해결

고충민원 제도 소개

고충민원 제도 소개

고충민원이란

집단민원 조정

주요 사례

옴부즈만 유형

옴부즈만이란

국방옴부즈만

경찰옴부즈만

기업옴부즈만

금융옴부즈만

달리는 국민신문고 안내

[달리는 국민신문고란](#)

[상담분야](#)

[연간일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자치법규안 및 운영안내서](#)

[조례제정사례](#)

[민원처리사례](#)

[운영상황보고서](#)

[채용공고](#)

[소식](#)

[고충민원 해결사례](#)

고충민원 자료실

결정례·사례집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해결사례 100선](#)

[2021년도 고충민원 결정례집\(통권 28호\)](#)

[2020년도 고충민원 결정례집\(통권 27호\)](#)

[기업고충민원 해결사례집\(기업고충민원팀 적극행정 3년의 성과\)](#)

[2020년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2019년 고충민원 결정례집\(통권 26호\)](#)

[2018년 고충민원 결정례집\(통권 25호\)](#)

[2017년 고충민원 결정례집\(통권 24호\)](#)

[2016년 고충민원 결정례집\(통권 23호\)](#)

[201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통권 22호\)](#)

기획조사

고충민원 제도개선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2022년도「민원서비스 종합평가」소개](#)

[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요 및 기관별 등급](#)

옴부즈만 활동

[\[보훈\] 국민권익위, “6·25 전사자인 아버지, 국립묘지에 모실 수 없는 것은 부당해”](#)

[\[국방보훈\]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 호국 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 및 군 장병 권..](#)

[\[보훈\] 정부합동 특별조사단, 유가족과 함께 전사·순직 군인 위패와 묘소 참배](#)

[\[국방보훈\] 국민권익위,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방·보훈 분야 고충상담 나선다](#)

[\[국방\] 국민권익위,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진료 기간 지났다면 진료받게 해줘야..](#)

[\[국방\] 국민권익위, “군사적 목적 사용의 민통선 내 사유지도 사용료 지급해야“](#)

[\[국방\] 국민권익위, 사용하지 않는 군 비행장 주민 품으로 돌려줘](#)

[\[국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강원도 내 미사용 해안철조망 · 초소 등 군사시설 철..](#)

[\[국방\] 국민권익위,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 군사시설 철거현황 점검 및 의견청취 자..](#)

[\[보훈\]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국방, 보훈\] 국민권익위·국방부, 군 장병 권익강화 위해 ‘국민권익위 국방 옴부즈만..](#)

[\[국방\] 국민권익위, “군 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별 체력검증·신체검사 일원화해야”](#)

[\[보훈\] 국민권익위, “완치되지 않은 채 퇴원하는 7급 현역병에게 군의관 소견서 발행..](#)

[\[국방\] 국민권익위·국방부·국가보훈처 합동으로 나라 위해 희생한 군인 2,048명 유가..](#)

[\[국방\]국민권익위, “공군사관학교 입시서류에 부모 직업을 써도 된다고?”](#)

행정심판 제도

행정심판 제도 소개

행정심판 제도 소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 대상

주요 사례

행정심판 기관의 구성

행정심판 위원명단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온라인 행정심판 안내

[행정심판 자료](#)

[행정심판 통계](#)

[웹툰으로 보는 행정심판](#)

[행정심판 발간물](#)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0년 행정심판 재결례집](#)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9~2020년 행정심판재결례집](#)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7~2018년 행정심판재결례집](#)

[2019~2020년 행정심판재결례집](#)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2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1권\)](#)

[2021년 행정심판재결례집](#)

[2020년 행정심판재결례집](#)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9년 행정심판재결례집](#)

[행정심판 사례검색](#)

제도개선·국민소통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

제도개선 권고사례

주요 개선사례

국민이 선정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

국민이 선정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일러두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정책 소통 창구를 운영 중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불편과 부패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 5년 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었고, 총 255건의 제도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해 이행되었거나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동안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권고한 주요 사례 총 100선을 선정해 수록하였습니다.

- 1장에는 2021. 12월 국민생각함 설문을 통해 국민의 추천과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사례 33선을 소개하였고, 제2장에는 기타 67선 사례의 핵심 내용과 기대효과를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 국민불편해소·권익개선 사례로 카드 디자인을 개선하여 급식아동에 대한 낙인효과를 예방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반값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의 국민 부담을 완화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등이 있고, 부패방지 제도개선 사례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해외여행·황금열쇠 등 제공 관행 금지' '공공기관들이 승소 후 소송비용을 미회수·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관행의 개선'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불편·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청렴 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Contents

국민 공감 선정 사례 33선

Part 1

사회안전망 강화

1.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개선해 낙인효과 방지한다	10
2.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및 서비스 개선	12
3. 가족폭력 피해자 거주지 노출 위험 줄인다	14
4.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노력 평가한다	16
5.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런 어린이집 폐원 사라진다	18
6.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한다	20
7. 견본주택(모델하우스) 화재안전기준 엄격해진다	22

Part 2

일상생활 속 불공정 개선

8.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대폭 늘린다	24
9. 콘텐츠 구독서비스 해지·환불 쉬워진다	26
10. 채용신체검사, 국민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한다	28
11.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공고, 누구나 볼 수 있게	30
12. 홈쇼핑 방송심의 제재결과를 소비자 피해구제와 연동한다	32
13. 교복 구매, 가격은 잡고 여학생도 바지선택 가능	34
14. 들쭉날쭉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수강료 이제 그만	36
15. 채용비리 연루자에 더 이상의 관용없다	38
16. 지자체 퇴직자, 해외여행·황금열쇠 제공금지	40
17. 공공기관 회의참석수당, 나눠먹기식 챙기기 이제 그만	42



Part 3

예산누수 차단

18. 학생지도비용, 행정직원에 대한 지급 제한한다	44
19.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사전검증 강화한다	46
20. 비위행위자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한다	48
21. 공공기관의 임대사업, 정보공개로 부정청탁 예방한다	50
22.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참여기준 강화한다	52
23. 공공기관의 소송비용 미회수 방치하지 말라	54
24. 농어민 위한 면세유 혜택, 농어민에게 돌아가도록	56

Part 4

국민불편 해소

25.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58
26.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	60
27. 소규모 관급공사, 무리한 저가·과소 설계 관행 개선	62
28. 세제혜택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손본다	64
29. 기술계고 졸업자, 경력 경쟁기회 확대한다	66
30. 공동주택 수도료 부과, 기준을 바로 세운다	68
31.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능품목 확대한다	70
32.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집행과정 공개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한다	72
33. 대입 전형료, 대폭 낮춘다	74

기타사례

67선

34. 불별 막아주는 고마운 그늘막, 시민 안전 해치지 않게!	78
35. 유족 두 번 올리는 화장장려금 제한 개선한다	78
36. 일상 속 차별, 하나씩, 꼼꼼히 바꿔간다	79
37. 장애아동 위탁부모도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가능	79
38. 국·공립대학 비법정협업체 회비 예산사용 제한	80
39. 소형건설기계 교육 이수증 허위 발급 방지	80
40. 노후 연금 수급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81
41. 공항 귀빈실, 특혜·불공정 사용 차단	81
4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게 한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82
43. 건설공사감리 하도급을 제한·금지 하도록 관련법률 정비	82
44. 시각장애인을 위한 건물주차장 출입구 안전시설 규정 개선	83
45. 대학회계 내부신고 보호시스템 구축	83
46. 법무사, 변리사 등 자격증 대여·알선하면 처벌받는다	84
47. 공공기관 인터넷 유통사업자 선정 시 공개경쟁 강화	84
48.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음주운전 수사사실 소속기관에 통보	85
49. 공공조달 뇌물 제공업체 제재 감경 배제	85
50. 근로자 연말정산 시 실부양 계부·계모도 인적공제에 포함	86
51. 신고포상금제 내부직원에게 지급 제한한다	86
52. 매입 임대주택, 표준관리방안 마련한다	87
53.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 이해충돌방지 기준 도입	87
54. 신규 계좌 개설 시, 증빙서류 대폭 간소화	88
55. 지방의회예산, 편법·사적 사용 제한	88
56. 일자리 관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응시 기회 확대	89
57.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 편법 사용 금지	89
58.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알 권리, 권익보호 강화한다	90
59.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자!	90
60. 범죄신고자도 보호 내용 사전에 고지 받는다	91
61. 공연예술 공모지원 사업, 중복지원 차단	91
62.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개입찰 제도 도입	92
63. 공무원 등 채용공고 없는 깜깜이 채용, 이제는 근절	92
64.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93
65. 자동차 이용 범죄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못해	93
66. 장애인의 자동차검사 예약 시 수수료 즉시 감면된다	94
67.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해진다	94

68. 공공기관 퇴직자단체 등 위법·부당한 예산지원 금지	95
69.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표절·도용 검증절차 마련	95
70.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해진다	96
71. 코로나로 학사일정 변동시 실제 개강일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	96
72. 색약자도 육군·공군 조리병으로 복무 가능 등	97
73. 복잡·난해한 행정제재 가중규정 명확해진다	97
74.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금지 등 부동산 투기 차단	98
7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시 군복무 기간도 포함	98
76. 대학 공개강좌 개설 운영의 법적 근거·기준 마련	99
77. 신입생 허위등록 방지 위한 검증·제재 강화	99
78. 학업중단학생도 인터넷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받으세요!	100
79. 고속도로 통행료 꿈수 면제차량 막는다	100
80.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및 음주치료 의무화 한다	101
81. 도로점용료 납부고지 전 소유권 변동 확인한다	101
82. 공공체육시설 특정단체 사용 제한한다	102
83. 의료분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율 통제시스템 강화	102
84. 채용비리로 계약 해지된 기간제 교원, 채용제한 근거 마련한다	103
85. 가정 배출 폐의약품 안전하게 별도 수거한다	103
86. 군 대체복무 취소 시 잔여기간 실제 복무기간 비율로 산정	104
87. 여권발급 제한기준 법령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104
88. 국·공립대학 교수 채용 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105
89. 재난정책보험 가입 확대 통해 재난지원금 절감	105
90. 약학대 학생 현장실무실습 등록금에 포함되어야	106
91.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106
92. 휴·폐업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 위험시설 안전조치 강화	107
93.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대상에 기술계고 추가	107
94.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 기간동안 편법운영 차단	108
95. 공급자 과실로 인한 갑작스런 전기요금 부담 전가 안돼	108
96. 가짜석유 근절 위해 엄정한 고발·공표 시스템 마련해야	109
97. 장기기증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유급휴가 확대	109
98. 국가유공자 보호자 휴양림 입장료 면제로 예우 확대	110
99. 50세이상 은퇴연령층도 후계농 육성사업 지원가능!	110
100. 군 지뢰 매설현황 등 공개로 주민안전 강화	111



권익위 제도개선 사례(여학생 교복선택권 확대)

권익위 제도개선 사례(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이달의 개선사례(11월)- SRT 공공할인 확대, 한부모지원 대상 확대 등

이달의 개선사례(10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의무교육시 전문치매검사결과 반영, 경찰..

이달의 개선사례(9월)-임신부 자녀 어린이집 우선순위 부여, 색약자 육군 조리병 지원..

이달의 개선사례(8월)-여객운수종사자 자격취소 강화, 군무원 필기시험 지방대도시 확..

이달의 개선사례(7월)-아동급식카드 사용 명확화, 시각장애인 점자신분증 확대, 스크린..

이달의 개선사례(6월)-일반계고 직업학과, 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생 산업기능요원 우선..

이달의 개선사례(5월)-국가유공자 대부시 연대보증 폐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개선, 국..

고충 제도개선권고

부패 제도개선권고

국민신문고 소개

국민생각함 소개

대외협력

청렴윤리경영

「2022년 11월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11

■ 가치사슬(Value Chain) 관리

2022 November |

Vol. 119





COVER STORY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체 과정을 가치사슬이라 한다. 가치 창출 과정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이 결합되고,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하는 부패, 환경, 인권 문제가 원청기업의 리스크로 연계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활동 중 하나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청렴윤리경영의 영역을 공급망 내 모든 이해관계자까지 확장하고, 가치사슬 관리에 대해 살펴본다.

01	전문가 코칭	04
	기업의 가치사슬과 부패 리스크 관리	
02	사례돌보기	07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가치사슬 관리 사례	
03	보고서리뷰	11
	가치사슬 내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방안	
04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13
	가치사슬 관리 의무에 대한 지침	
05	문화 속 기업윤리	19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유하고 공유 받아야 한다. 영화, '조이'	
06	뉴스클리프	20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 국내외 동향	
07	웹툰: 바로보는 기업윤리	22
	우리도 ESG	
08	행사소식	23
09	퀴즈	24



전문가 코칭

기업의 가치사슬과 부패 리스크 관리

이 은 경 실장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Q1. 청렴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기업 내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사슬¹⁾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 공급망 관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업 공급망은 점점 더 글로벌해지고 복잡성을 띠며, 규모도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됩니다. 기존 공급망 관리에서 기술/품질 우수성, 비용 효과성, 납기 신속성, 신뢰성과 안정성은 공급망 및 조달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집중해온 분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조달, 공급, 제조, 유통,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가치사슬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망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보건안전, 지정학적 분쟁, 원자재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분쟁 광물 및 현대 노예, 뇌물 부패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는 공급망 위험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복잡한 경영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파트너, 제3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제3자 활용이 증가하고 공급망에서 부패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데에는 다음과

1) 가치사슬과 공급망(공급사슬)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이 가치의 창출과 분배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면 글로벌 공급사슬은 최종재 생산기업과 납품기업 간 조달 관계가 핵심이다. (편집자 추가, 국내 항만의존 산업의 가치사슬과 공급망 연계성 강화방안-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12.)

4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같은 강력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낸 글로벌 경제는 신규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들에 제공하고, 성장률이 높은 시장은 일반적으로 본사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 부패 가능성이 높고 기업 문화도 다릅니다.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해외업무위탁, 제3자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경영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부패 리스크 또한 상당 수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기업이 낮은 수준의 반부패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패 유혹을 받거나 제3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사업 파트너의 부패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기업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투자자들 역시 기업의 부패 리스크 관리를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패한 사업 파트너와 연루된 기업은 명성을 잃고,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 ESG 경영에서도 투명한 거버넌스와 윤리적 경영활동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Q2. 청렴윤리경영 측면에서 효과적인 가치사슬 관리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업이 가치사슬의 초점을 주요 협력업체에 맞춤으로써 생기는 이익도 있지만, 이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약화되고, 부패와 뇌물, 인권, 환경 문제, 법적 피해와 평판 손상 등의 리스크에 취약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 협력업체에 더 많은 사업 운영을 위탁함에 따라 이러한 리스크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가치사슬 환경에서 기업이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부패방지 프로그램 및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몇 년 전 글로벌 기업들의 고위 준법감시임원 267명이 참여한 조사²⁾에 따르면, 40%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뇌물 및 부패 리스크가 매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리스크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해외 진출(55%), 제3자와의 관계 증가(54%), 기존의 규제 집행 증가(51%)를 꼽았습니다. 또한, 점점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벌금 상위 10건의 뇌물부패 이슈는 대다수 컨설턴트, 대행업체, 합작기업 파트너 등과 같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이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3자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제3자가 기업이 요구하는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들의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투명성기구는 다음과 같은 제3자 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청렴성을 추구하는 지배구조와 이에 대한 의지를 보장하는 기업 환경 조성
2. 기업의 운영 전반에서 제3자 관리를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접근 방식 개발 시행
3. 제3자와 신뢰 및 건설적인 관계 형성 및 공동의 목표 마련
4. 모든 제3자의 파악하고 정보 수집, 분석
5. 제3자 리스크 평가 절차 및 실사 기준을 마련, 전체적인 뇌물방지 프로그램 설계, 발전
6. 제3자의 기준 준수 및 참여 유도, 리스크에 따른 적합한 절차 마련
7. 제3자에 대한 잠재 리스크 평가 및 적절한 수준의 사전 실사 실시
8. 권고 및 보고 체계와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활용으로 제3자와의 관계 관리
9. 엄격한 모니터링 절차 실시로 뇌물 사건 및 뇌물방지 프로그램 위반을 예방 및 파악
10. 제3자 부패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와 평가
11. 제3자 부패방지 관리의 현황에 관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 공개

제3자 리스크 관리, TI UK / UNGC 한국협회 번역

기업은 위의 요소들을 고려해 공급망 관리 원칙을 세우고,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의 기본 사항이며, 기업 ESG 경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2) The Year of Global Expansion and Enforcement: 2016 Anti-Bribery and Corruption Benchmarking Report (Kroll and Ethisphere, 2016), p.11 and p.14.

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사례돌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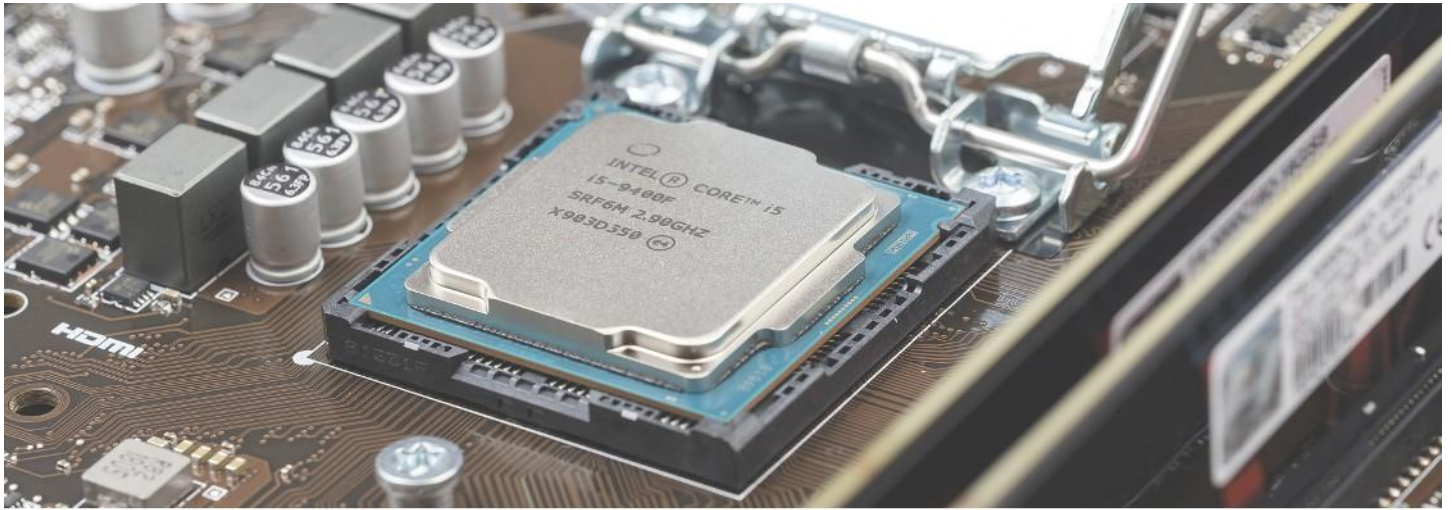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가치사슬 관리 사례



VALUE CHAIN



가치사슬이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유통하면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고객에게 최종재를 제공하기까지 부품, 기자재, 원료의 구매에서부터 조달, 제조, 운송, 유통 등 각 과정을 담당하는 공급업체들을 통칭하기도 한다.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공급업체 관리 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요한 사항으로, 공급망 관리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기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인텔

인텔은 미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회사로 스마트폰, 노트북, PC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회사이다.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주석, 텅스텐, 금 등과 같은 광물자원을 재료로 사용하는데, 이 광물들은 ‘분쟁광물(Conflict Mineral)’이라고도 불린다. 그 이유는 채굴지역이 주로 아프리카의 분쟁지역이며, 채굴과정에서 노동착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하나로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목표로 삼고, 이에 따라 분쟁광물을 비롯하여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광물의 채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인텔은 2009년 공급망에서 분쟁지역 광물 사용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고, 설문문을 통해 광물 공급업체의 채굴 원산지 추적성, 분쟁지역광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2010년 분쟁지역광물 사용 의무공시를 시행하는 도드-프랭크 법안(Dodd-Frank Act, Section 1502)의 제정에 반대하던 기업, 단체들과는 달리 법안을 지지하고, 분쟁지역 광물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 것은 인텔의 가치사슬 관리 면모를 알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인텔은 글로벌 가치사슬 전 영역에 걸쳐 ESG 경영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기업책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0년에는 사회적 책임(Responsible)과 포용성(Inclusive)을 갖추고, 지속가능한(Sustainable) 미래를 창조한다(Enabling)는 비전을 발표하고 비전의 앞 글자를 따서 RISE 기술 이니셔티브(Intel RISE Technology Initiative, IRTI)를 발표했다. 이니셔티브의 내용은 완전한 수자용 재사용, 100% 녹색 에너지 구현, 제조분야 폐기물 제로, 여성과 소수자 임원 비율의 두 배 증가, 인권 프로그램의 확대이다.

인텔은 가치사슬 확립 및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텔은 지난 30년 간 반도체 제조 생태계에 포함된 120개 기업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파운드리 생태계에 속한 스타트업 및 기업들의 혁신기술 발굴을 지원할 계획으로 인텔 캐피탈과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자사의 이익 추구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협력업체를 지원한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2. 존슨 앤드 존슨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가 선정한 2022년 공급망 관리 상위 25개(The Gartner Supply Chain Top 25 for 2022) 기업에 존슨앤드존슨이 4위에 올랐다. 가트너는 기업 실적과 함께 ESG 지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매년 공급망 관리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이 공급망 관리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이노베이션 협업 공간'을 회사 내에 구축하는 등 직원, 고객 및 외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은 협업을 통해 수술용 임플란트 공정 과정을 혁신하고, 물류 과정을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존슨앤드존슨은 '우리의 신조-CREDO'에 기반을 둔 경영철학을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하여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의 신조-CREDO' 준수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파트너사의 컴플라이언스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사가 컴플라이언스를 단기간 내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함께 고려하여 파트너사에게 매년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는 협력업체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고, 매년 진행하는 협력업체 역량평가에 사회·환경성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 역량평가 결과는 다시 협력업체에 금융, 기술 및 품질개선, 경쟁력 강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협력업체가 채용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인 협력업체 전용 온라인 채용관 활용 실적이 우수한 협력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전략 및 제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솔루션 또한 제공한다.

이와 같이 유한킴벌리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참고

-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026>
-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88>
-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09>
-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08>
- <https://www.janssen.com/korea/company/companyInfo>
- 2022년 유한킴벌리 지속가능보고서(https://csr.yuhan-kimberly.co.kr/resources/file/yk_2022_kor.pdf)



보고서리뷰

가치사슬 내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방안

■ OECD(2018)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은 기업이 경제, 환경 및 사회발전 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있어 공급망을 포함한 경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사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ESG의 G(거버넌스) 측면에서 기업책임경영에 대해 살펴본 바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6단계로 제시한 실사지침 중 공급망 내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단계는 기업책임경영에 필요한 정책 및 관리시스템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기업책임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로, 공급망 내 업체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부터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내 업체들과 기업책임경영 관련 핵심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관련 내용을 계약 형태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내 업체들이 기업책임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실사와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2단계는 기업경영활동에서의 리스크 평가 실시이다. 이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공급망에서 실재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영향이란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기업경영활동으로 인해 사람이나 환경 또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중지시키거나 방지, 예방해야 한다. 리스크 평가를 거쳐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리스크를 단기간 내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기업실사 이행의 효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기업실사를 통해 부정적 영향의 방지에방 조치를 했다면, 이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가 부정적 영향의 방지와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업실사를 통해 관련 회사에 부정적 영향의 예방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가 속한 산업계의 특성 및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급망 전체에서 책임윤리경영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5단계에서는 기업실사를 통해 드러난 실재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고 의사소통한다. 특히 기업에 의해 발생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들과 그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정보들을 쉽게 접근가능하면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다국적 기업의 경우 현지 언어로 제공하여 정보의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단,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와 시기적절하고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

6단계에서는 기업활동으로 발생한 확인된 리스크의 경우 이를 직접 구제하거나 구제에 협력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 부정적 영향 특히 인권 관련 문제의 경우 구제 방법 결정 시 영향권 내에 있는 협력업체 또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는다.

모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한 기업실사 등을 통해 가치사슬 내 모든 회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협력업체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모회사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지나친 경영개입 또는 형식적 관리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함께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가치사슬 관리 의무에 대한 지침

오늘날, 한 기업의 활동은 더 이상 해당 기업만의 개별적인 활동으로 존속할 수 없고 가치사슬의 유기적 연결 속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치사슬을 포함한 거버넌스 · 인권 · 환경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EU는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의무와 위반시 제재 내용을 담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발표하였다.



1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도입 배경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거버넌스 · 인권 · 환경 등 관리에 대한 EU 차원의 기업 의무 법제화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EU 의회는 2021년 3월 EU 집행위원회에 실사 지침 발의를 요구하였고, EU 집행위는 2022년 2월 23일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Proposal for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실사 지침')을 발표하였다. 실사 지침은 EU 의회 및 이사회 승인 시 발효되며, EU 회원국들은 발효일 기준 2년 내에 지침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국내법을 개정 · 적용해야 한다.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EU기업과 제3국 기업 중 고용인, 매출액, 산업군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EU 기업 여부	기업규모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 (해당 조건 동시충족시 적용)	예상 기업 수
EU 기업 (EU 회원국 법률에 의거 설립)	대기업 (Group1)	- 고용인 500명 초과 -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9,400개
	중견기업 (Group2)	- 고용인 251~500명 -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순매출액 4천만(초과)~1.5억 유로 -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	3,400개
제3국 기업 (제3국 법률에 의거 설립)	대기업 (Group1)	- 근로자수 기준 미적용 - 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EU 전체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2,600개
	중견기업 (Group2)	- 근로자수 기준 미적용 - 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EU 전체 순매출액 4천만(초과)~1.5억 유로 -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	1,400개

2) 적용범위

해당 기업,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 실사 지침은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s)'의 협력업체에 전반적으로 적용하며, 매년 협력업체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기업 자체, 자회사, 직접공급자, 하도급자, 간접공급자 등 해당 기업과 일정기간 비즈니스 관계 지속이 예상되며, 유의미하고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모든 공급자 대상이다.

3) 적용시기

대기업은 지침 발효 2년 내, 고위험 산업의 중견기업은 지침 발효 4년 내 적용대상이 된다.

- EU 의회와 이사회가 해당 지침을 채택하면 EU 회원국은 지침 발효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시행한다.
- 2022년 4분기에 지침 채택시 대기업 적용시기는 2024년, 중견기업은 2026년으로 예상된다.

4) 공급망 실사 의무

인권·환경에 대한 내부 정책수립, 영향 파악·예방·대응·신고 접수 이행사항 공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① 기업 정책에 실사 내재화

기업은 실사 의무를 기업 정책에 통합하여 사내 실사 규정(due diligence policy)을 마련하고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

- 사내 실사 규정에는 △ 실사의무에 대한 회사의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 △ 회사 직원 및 자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행동 강령 △ 실사를 시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파악

대기업은 해당 기업, 자회사 및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파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정적 영향 파악을 위해 기업은 독립적인 보고서 및 신고절차(complaints procedure)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잠재적 피해자와 논의 가능하다.
- 중견기업은 해당 고위험 산업(high-risk sectors)과 심각한(severe) 부정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③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 및 완화

기업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개인, 시민단체, 공급망 내 노동조합 및 피고용인 등)와 논의하여 예방 조치 계획 마련 및 시행한다.
- 직접적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계약상의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간접적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계약상의 보증 요청을 권장하나 의무는 아니다. (단, 향후 손해배상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의 보증을 받는 것이 안전함)

④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의 종료 및 최소화

- 기업은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의 종료 또는 최소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과 기업 활동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한다.
-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의 즉시 종료가 불가능할 경우, 적시에 시정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직접적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계약상의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간접적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계약상의 보증 요청을 권장한다.

⑤ 신고절차 확립 및 유지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잠재적인 또는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당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⑥ 실사 규정 및 조치의 효율성 점검

기업은 인권 및 환경에 관한 부정적 영향의 파악·예방·제거 관련 사내 실사 규정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기업,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의 운영 및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⑦ 실사의무 이행내용 공개

기업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성명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5) 의무 위반 시 제재

회원국이 금전 및 행정 등 제재조치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특정행위 중단 명령, 임시조치 명령, 금전적 제재(벌금) 등을 제재 수단으로 삼을 수 있으며, 단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규모는 기업 매출액에 비례해야 한다.
- 기업 자체활동뿐 아니라 협력업체로 인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회원국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기업이 협력업체와 계약상의 보증 체결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2 독일 공급망 실사법

도입 배경

독일 공급망 실사법 제정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UNGPs는 공급망과 가치사슬에 대한 기업 책임의 개념을 처음으로 명시한 기준으로,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이 원칙을 입법화하여 기업에 의무를 부여한다.

독일은 2023년 1월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시작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인권 보호 강화에 목표를 두었다.

주요 내용

공식 명칭	LkSG: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시행 예정일	2023년 1월 1일
적용 대상	• 2023년부터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 • 2024년부터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인 기업 • 추후 적용 범위 평가 예정
주요 사항	• 기업 실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 최초 포함 •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 • 관할 기관에 의한 외부 모니터링 • 인권 보호 강화 • 사람/환경 유해물질 사용 규제
위반 시 벌금 (가능성)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2% (매출과 관련된 벌금의 경우 연매출이 4억 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자료: 독일연방경제협력 · 개발부(BMZ), 독일연방경제 · 기후보호부(BMWK), [csr-in-deutschland.de](https://www.csr-in-deutschland.de)]

1) 적용대상

- 2023년부터 독일에 근무하는 고용 인원이 30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우선 적용되며, 약 900개의 기업에 해당한다.
- 2024년부터는 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적용되는 기업은 독일에 지사를 둔 외국계 기업에도 해당한다.

2) 실사 의무

① 인권 침해·환경 피해 위험에 대한 실사 의무 포함

실사 의무의 핵심요소에는 인권 침해 및 환경 피해의 위험을 식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② 전체 공급망에 실사 의무 적용

실사 의무는 대상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을 포함해 직접 공급업체 및 간접 공급업체까지 적용하며, 기업 실사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	•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 강력 채택 • 위험 분석: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을 위한 절차 시행 • 위험 관리(예방 및 구제조치 포함): 인권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방지 • 고충처리절차 구축 • 문서화 및 보고
	• 독일 내 위반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함
직접 공급업체	•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 강력 채택 • 위험 분석: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을 위한 절차 시행 • 위험 관리(예방 및 구제조치 포함): 인권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방지 • 고충처리절차 구축 • 문서화 및 보고
	• 직접 공급업체의 경우 가까운 시일내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없을 시 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간접 공급 업체	• 잠재적인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아래의 실사 의무 즉시 적용 • 위험 분석 시행 • 위반 행위 최소화 및 방지 계획 실행 • 위반한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 시행. 이 경우 업계 전반의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는 것 또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대두

[자료: 독일연방경제협력 · 개발부(BMZ)]

인권보호 및 환경보호 관련 요구가 커져가는 글로벌 환경에서 공급망 실사 의무는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도 이러한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 EU 공급망실사지침(안) 주요내용과 기업사례 - 한국무역협회 (<https://zrr.kr/SKNl>)
- EU 공급망실사 지침 주요내용과 시사점 - KDB미래전략연구소 (<https://zrr.kr/UBQl>)
-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의미와 한계, Maren Leifker,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11월호(Vol.19, No.11)
- 독일,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 시행,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zrr.kr/OUkF>)



문화속
기업윤리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유하고 공유 받아야 한다.

영화, '조이'



* 이미지출처: 네이버 영화

깨진 유리잔을 치운 걸레를 맨손으로 빨다가 손을 크게 다친 조이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상상력으로 손으로 직접 빨지 않아도 되는 기발한 밀대걸레를 발명한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상품화에 성공하지만, 위기는 끊이지 않는다.

영화 '조이'는 기발하고 다양한 생활용품을 개발한 사업가 조이 망가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녀는 밀대걸레를 홈쇼핑에서 판매할 기회를 어렵게 얻지만, 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쇼맨십으로만 판매하려는 쇼호스트로 인해 판매 부진으로 빗더미에 앉을 위기를 겪는다. 게다가 투자자의 말만 따르다가 특허권을 부당하게 빼앗기고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투자자는 조이의 실패에 대해 '사업이란 원래 불공평하다', '너에겐 사업가로서 배짱과 센스가 없다'라고 지적한다.

조이가 추구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가사활동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까지 단계마다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투자자 등 많은 사람들을 거치고 연관되어야 한다. 조이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창의력과 강한 책임감을 갖춘 사업가였지만, 이들 모두에게 그녀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지는 못했다. 그저 쇼호스트의 능력만 믿고, 그녀가 제품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를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특허권의 존재 여부와 개런티 지급의 정당성 또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기업은 개인이 아닌 여러 자원과 인력이 결합하는 유기체이며, 가치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부분에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망 내의 모든 관계자들 간 명확한 가치 공유, 그리고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뉴스클리프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2차 시범운영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청렴윤리경영 2차 시범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2차 시범운영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포함한 총 14개 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기관별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각 기관들은 청렴윤리경영 CP 가이드라인과 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CP를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결과에 대한 심사는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며 우수기관에는 포상이 수여된다. 국민권익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다시 제도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기관들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중남미 국가에 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에 전수하기 위해 대면 연수과정을 개설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코스타리카 검찰원과 파라과이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 정부가 반부패 우수사례 공유 및 자국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남미를 비롯해 아프리카, 중동 지역까지 반부패 기술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외 동향

EU, 원자재법 제정 추진



EU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EU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리스크 관리, 공급망 강화, 지속가능 경쟁여건 형성 등 4가지 측면에서 키워드 수준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역량, 연구·혁신(R&I)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의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RMA(Raw Materials Act)가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RMA 추진동향을 모니터링하고 EU측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MoneyS 2022. 10. 19.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01816123084138>

ESG 정보 공시제의 기준 표준화·단일화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제 4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ESG 정보 공시 제도가 많아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효율적인 ESG 정보 공시기준을 통해 기업의 공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SG 정보 공시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정부에서 효율적인 공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회의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ESG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시-평가-투자에 이르는 ESG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제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헤럴드 경제, 2022. 9. 16.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916000356&ACE_SEARCH=1



바로보는 기업윤리

웹툰

우리도 ESG



글로벌 경영 환경이 ESG를 향하고 있습니다.

변화에의 대응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가 됩니다.

*참고 <https://edu.acrc.go.kr>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 청렴교육 자료 > 청렴교육 시청각자료



행사소식

2022 THE ESG포럼



기업가치 상승에 있어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관련 제도와 현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포럼

주최 조선비즈

일정 2022년 11월 15일(화)

장소 코리어나호텔 다이아몬드홀

참고 <https://e.chosunbiz.com/tc-events/2022-the-esg%ED%8F%AC%EB%9F%BC/>

Corporate Compliance & Ethics Forum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리스크 관리, 기업의 윤리 이슈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포럼

주최 Consero

일정 2022년 12월 11일(일) ~ 13일(화)

장소 The Biltmore Miami, Coral Gables, FL, USA

참고 <https://consero.com/events/corporate-compliance-ethics-forum-5/>

「2022년 10월호」

「2022년 09월호」

「2022년 08월호」

「2022년 07월호」

「2022년 06월호」

「2022년 05월호」

「2022년 04월호」

국제교류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소개 영문 리플렛\(국민신문고, 청렴포털, 온라인 행정심판, 국..](#)

[2022년 9월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2022년 7~8월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2022년 6월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2022년 5월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영문백서](#)

[2022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어 브로슈어\(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영문법령\(2022년 5월 기준\)](#)

[2022년 4월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2022년 3월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2022년 2월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2022년 1월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2021년 12월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한국에서 온 청렴의 물결' 브로슈어\(국, 영문\)](#)

[2021년 11월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2021년 10월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2021년 9월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2021년 8월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2021년 7월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해외 반부패 옴부즈만 동향\(2021년 상반기\)](#)

민원·신고

고충민원신청

신청방법안내

부패공익신고

신고방법안내

상담신청

행정심판청구

청구방법안내

방문상담예약

방문상담안내

국민참여

적극행정

제도소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2022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2022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2021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2021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20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2021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20년 3분기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선정 관련 보도자료](#)

[2020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

[알림/소식](#)

[카드뉴스/웹툰/영상 등](#)

[내 정보는 내 손으로!](#)

[기업고충민원 해결사례집\(기업고충민원팀 적극행정 3년의 성과\)](#)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로 하세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홍보 자료](#)

[만화로보는 통계청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게시](#)

[적극행정 사례집 게시](#)

[적극행정 브랜드 홍보영상](#)

[k방역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하다](#)

[코로나19 관련 공익신고 대상행위](#)

[적극행정 홍보영상 링크게시](#)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제689호, 2022.10.24.~10.30.\)](#)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제688호, 2022.10.17.~10.23.\)](#)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제687호, 2022.10.10.~10.16.\)](#)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제686호, 2022.10.3.~10.9.\)](#)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제685호, 9월동향\)](#)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제684호, 2022.9.19.~9.25.\)](#)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제683호, 2022.9.12.~9.18.\)](#)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제682호, 2022.9.5.~9.11.\)](#)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제681호, 8월동향\)](#)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제680호, 2022.8.22.~8.28.\)](#)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신청

예산절감제안신청

[규제개선](#)

[건의신청](#)

[규제혁신 과제현황](#)

[심사중인 규제법안](#)

[부처별 보도자료](#)

[규제법령 정보](#)

[규제혁신 홍보자료](#)

[규제입증 요청](#)

[뉴스·소식](#)

[새소식](#)

[알립니다](#)

[채용정보](#)

[보도자료](#)

[보도자료](#)

[언론보도설명](#)

홍보자료

사진뉴스

카드뉴스

2022. 10.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0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 온라인으로

한방에 끝!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상담 온라인으로 한방에

2022. 9.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9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새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민권익위원회

새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



이행실태
후속점검

2021 공공재정환수제도 점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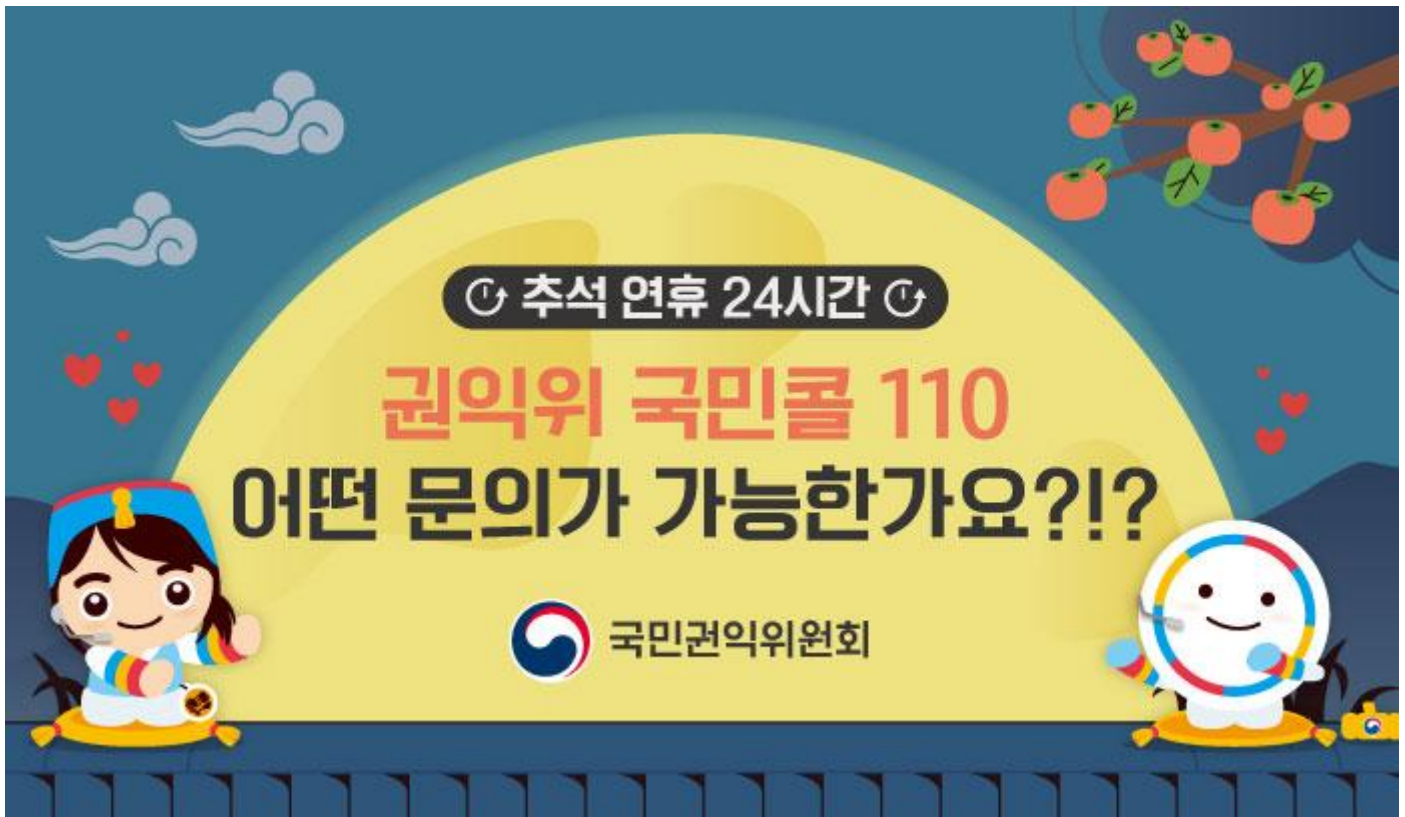
[2021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후속점검 결과](#)

2022년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합니다.](#)



[추석 연휴 국민콜 110](#)



[따뜻한 사회, 청렴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2022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동영상뉴스](#)

[국민권익블로그](#)

[국민권익소식지](#)

  "소식지 국민권익" (국민권익위) 참조

[기타 홍보자료](#)

[2021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관련 홍보배너](#)

[2020 권익위 경찰민원 해결 베스트](#)

[2020년 반부패주간 안내자료\(포스터, 배너, 카드뉴스\)](#)

[2020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리플렛 및 홍보배너](#)

['2020년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홍보영상](#)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

[공공재정환수법 홍보영상](#)

[공공재정환수법 리플릿 및 소책자](#)

[공공재정환수법 포스터](#)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비공개대상정보기준

정보목록자료실

사전정보공표목록

사전정보 공개

정책실명제

정책·평가

국회·예산

[국고보조금 정보](#)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국외출장 현황](#)

[포상추천대상공개](#)

[부패행위 현황 공개](#)

[기타자료](#)

[협동조합 경영공시](#)

[정책연구](#)

[위원회 법령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

[입법행정예고](#)

[위원회 의결정보](#)

[고충민원 의결정보](#)

[고충민원 결정례](#)

[부패방지 의결정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행정심판 재결정보](#)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신청](#)

[공공데이터 품질오류신고](#)

[공공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기록관

기록관 소개

기록물 현황 통계

권익위 발자취